

명확한 기준 ‘無’...광주 중대선거구 논란 확산

인구 증가성 반영 안돼...선거구별 형평성 도마위 진보 “소수당 진입 차단”...민주당 내에서도 불만

광주 광역의원 선거에 첫 도입되는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싸고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기준 1인 선거구 2~3곳을 묶어 3~4인을 선출로 전환해 의원 경수를 늘리는 게 골자인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광주 동남갑, 북구갑, 북구를, 광산을 등 4곳에 중대선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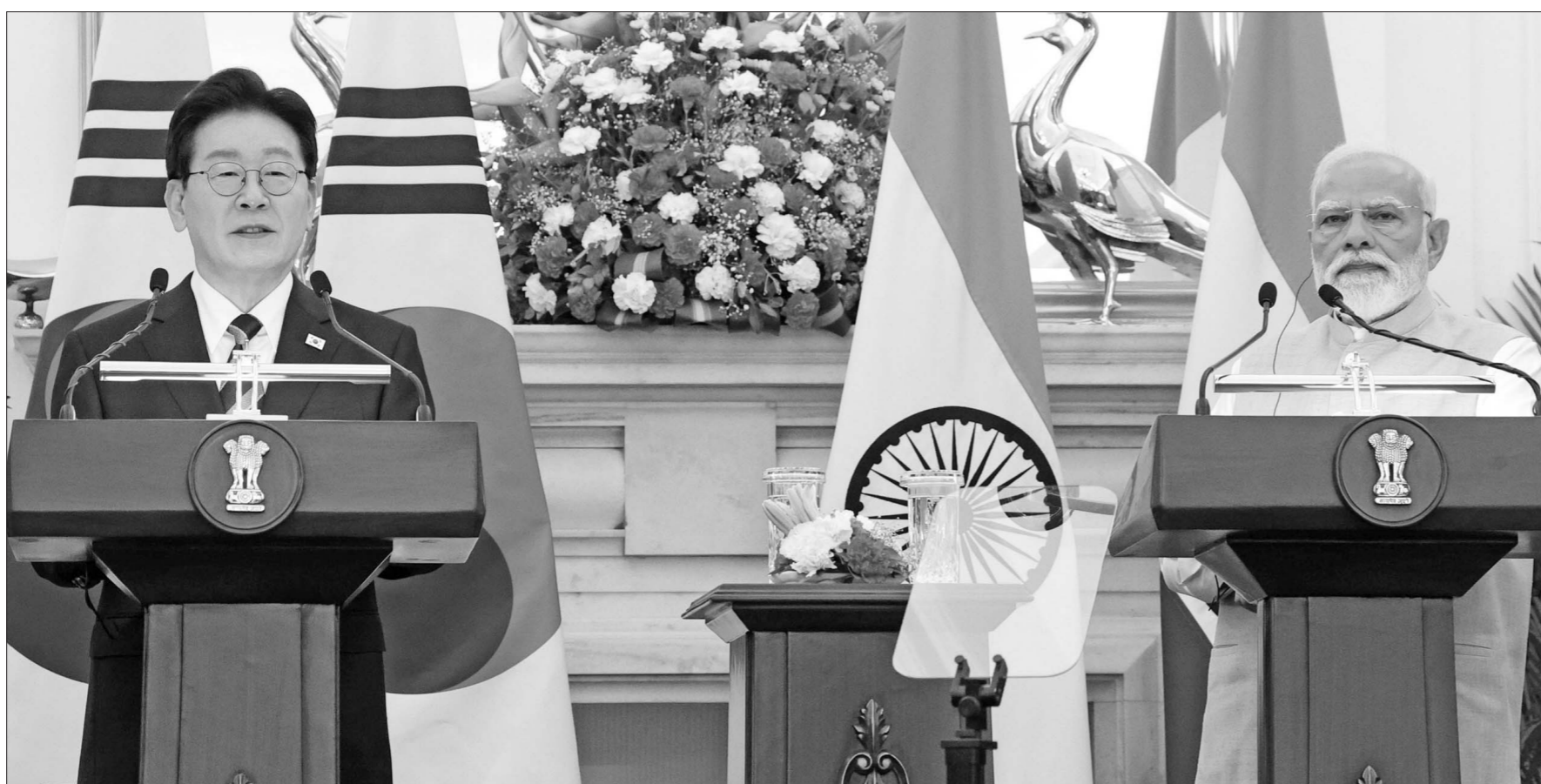
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기존 1·2선거구가 통합돼 3명을 선출하는 ‘남구 1선거구’로 바뀐다. 북구 갑은 1·2·3선거구를 묶어 4인을 선출하는 ‘북구 1선거구’로 재편되고, 북구 을에도 5·6선거구를 통합해 3명을 뽑는 ‘북구 2선거구’가 신설된다. 광산구는 비야동을 분리해 3·5선거구와 통합, 3명을 선출하는 ‘광산 3선거구’로 개편, 각 선거구당 광역의원 1명씩을 더 선출하게

됐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 설명이 없어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기존 광주의 선거구는 일부 지역의 시의원 1명이 인구 10만명을 대표하는 등 불균형이 극심했다. 광산을 제5선거구가 10만 1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갑 제2선거구 9만9000여명, 북구를 제4·6선거구도 8만8000여명에 달했다. 이 같은 인구 격차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번 개편에서 중대선거구로 묶였다. 하지만 모든 과립 선거구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서구갑 제2선거구와 광산갑 제2

선거구만 하더라도 8만300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구을의 선거구는 다른 지역과 중대선거구 적용 방식이 달라 논란이 크다. 북구갑 3개 선거구는 4인을 선출하는 하나의 중대선거구로 묶였지만, 인구 8만 8000여명의 북구를 제4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를 유지하고 제5·6선거구는 통합돼 3인 선거구로 재편됐다. 때문에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중대선거구를 적용했다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출마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 후보의 지지세가 높은 북구를 제3선거구만 편셋

으로 도려내듯 선거구를 쪼갠 것은 노골적인 기득권 정치의 결과”라며 “기준과 원칙 없이 진보당이 오랜 시간 기반을 다져온 지역만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의회 사상 처음 도입되는 중대선거구제의 분례 취지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에 있다”며 “이번 선거구 확정은 진보당의 원내 진입을 막으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광산을 재편 과정도 논란이다. 광산을 제3·5선거구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기존 제4선거구 일부인 비야동을 포함해 재편했는데, 이를 두고 생활권보다

선거구 조합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민주당 광주 광산을 일부 후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시민이나 대의명분이 아닌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조정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과연 시민을 위한 선거구 획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명분은 인구 불균형 해소지만 실재는 정치 공학적 설계자 작용한 것이 다분하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냐 다름 없는 만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사 goback@gwangnam.co.kr



한-인도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한인도

김영록 지사, 민생사업 신속추진·지원 당부

비상경제회의 열어 물가·에너지·산업 전반 점검

전남도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점검에 나섰다. 전남도는 20일 ‘비상경제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주요 산업 동향을 중심으로 분야별 현황을 점검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농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영향 분석과 함께 면세유, 나프타, 아스콘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상승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남도는 글로벌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 불안,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사진)는 “정부 추경에 반영된 민생안정 사업과 도 자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여행업계와 택시업계, 문화예술 분야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민생 지원사업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림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 AI 메디뷰티 초광역 사업 선정...바이오 산업 고도화

강원·제주와 공동 추진...국비 46억원 포함 총 66억원 투입

전남도가 인공지능(AI) 기반 메디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강원·제주의 초광역 협력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바이오소재와 AI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공모에 ‘초광역 협력 기반 메디뷰티 소재 및 AI 피부진단·분석 플랫폼 개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행사업이다. 전남·강원·제주가 각 지역의 강점을 결합해 공동으로 추진하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6억원을 포함해 총 66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바이오소재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메디뷰티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고기능성 메디뷰티 소재 개발과 피부 데이터 포

준화, 실시간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개인 맞춤형 뷰티소재 추천 AI 모델 개발 등이 다. 전남에서는 전남지역산업진흥원과 전남바이오진흥원,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바이오에프디엔씨가 참여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개선과 포토메카닉 기반 펩타이드 개발, 플랫폼 구축을 맡는다. 최근 뷰티산업은 기능성과 개인 맞춤형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피부 진단과 바이오소재 기술을 접목해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시장 진출 확

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이 바이오소재 산업 고도화와 함께 AI 기반 메디뷰티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광역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과 산업화,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초광역 협력 기반에서 바이오소재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AI 메디뷰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역단체장 후보’ 與의원, 29일 의원직 일괄 사퇴

23일 광역 후보 전원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29일에 일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 대천항수산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일각에서 폄수로 국회의원에서 사퇴하지 않고 재·보궐 선거를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데 의심일 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지만,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같이 진행되려면 이번 달 30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의 경우 사퇴 시점을 늦춰 보궐 선거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정 대표가 29일 일괄 사퇴 방침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인천 연수구) △추미애(경기 하남) △전재수(부산 북갑) △김상욱(울산 남갑)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민형배(광주 광산)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 △위성근(서귀포) 의원 등의 지역구 8곳이 보선 지역에 추가된다. 정 대표는 “목요일(23일) 오전 11시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 전체 모임과 출정식이 있다”며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국민께 솔직하게 다가가고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절차에 맞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양동시장서 장보면 지하철이 무료”

광주교통공사, 24일 ‘전통시장 이용의 날’ 운영

광주교통공사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운영한다. 광주교통공사는 오는 24일 서구 양동시장에서 행사를 열고, 당일 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동전통시장의 대표 행사인 ‘제4회 양동통매축제’와 연계해 진행된다. 공사는 행사 당일인 2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양동시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도시철도 1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무료 이용권은 당일 양동시장에 대입되어 마련현장 부스에서 배부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주교통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도시철



도 1호선을 비롯해 향후 개통 예정인 2호선(1단계) 역세권 인근 전통시장과 연계해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확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구상이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 전통시장 이용과 함께 도시철도도 적극 이용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photo25@

민주 광주시당, 광역의원 경선 돌입

오늘부터 이틀간...내일 오후 11시께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2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광역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당은 중앙당 당무위원회가 광역의원 경선 관련 당규 수정안을 최종 의결로 경선 틀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이날로 예정됐던 투표 시작일을 하루 순연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ARS 투표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첫날인 21일에는 당원에게 전화로 거는 ‘아웃바운드’ 방식(총 5회)이, 둘째 날인 22일에는 전날 미참여 당원이 직접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인바운드’ 방식이 적용된다. >이산화 기사 goback@gwangnam.co.kr

시당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스캔 전 화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ARS 발신 번호를 사전에 공고할 예정이다. 21일 오전 중 1일차 아웃바운드 발신 번호를 광주시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22일 역시 인바운드용 투표 번호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경선 결과 발표는 오는 22일 오후 11시 이후 광주시당에서 진행된다. 윤중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당규 개정이 완료돼 경선을 위한 실무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당원들께서는 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 번호를 확인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사 goback@gwangnam.co.kr

▶1면 ‘녹색대전환’서 계속

사이먼 스틸 UNFCCC 사무총장은 “중동 분쟁은 화석연료 비용 상승을 촉발하며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며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한국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녹색대전환 전략을 통해 탈탄소화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연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며, 탄소중립 포럼과 산업 세미나, 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같은 기간 여수에서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과 ‘2026 기후변화주간’이 함께 열려 국제사회 협력 논의가 이어진다. 기후주간은 오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주요 의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1986 당사국과 국제·비정부기구 관계자 1000여명이 참여한다. 기후변화주간은 지구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로, 올해는 ‘지구는 녹색 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여수와 서울에서 열린다.